

제14주제 -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도시

2016년 4월 7일 (오픈특강)

주제발표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1세기 소득불평등과 사회정의”

진행 | 김광중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주임교수)

시대의 흐름과 사회정의의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1945-1979년 사이의 시기는 선진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역사상 가장 높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 역시 역사상 가장 컸던 이 시대에 선진국들은 최고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고,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역사상 가장 낮았으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계층상승의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고도성장, 낮은 소득불평등, 기회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겹친 시기는 이 때 뿐이다. 한국의 경우 1970-90년대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양적완화 등의 정책으로 대처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철학자 윌핑중 교수는 우리나라를 ‘울혈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있다

는 것이다. 울혈사회를 벗어나려면 사회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정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각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며, 돈을 벌고 출세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사회적 최약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불평등만 허용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았다.

소득불평등 문제: 소득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최근 보수성향의 OECD, IMF, 다보스 포럼 등도 일제히 경고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국민 전체의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 배율(소득계층 최상위 10%의 총소득을 최하위 10%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 1980년에는 7이던 것이 2013년에는 10에 이르렀다. 나라별로 보면, 북구 국가들의 10분위 배율이 가장 낮았다. 회원국들의 평균 10분위 배율은 8.4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10.1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 중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한국을 꼽고 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IMF부총재조차 한국의 심한 소득불평등을 경고하면서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경제학자 Piketty도 최근에 출간된 저서 “21세기의 자본”에서 소득불평등을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성장 초반기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지만, 고도성장기, 완숙단계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낮아진다는 쿠즈네츠의 가설은 오류이며, 시장에서는 빈부격차를 강화하는 힘이 약화시키는 힘보다 강하므로 시장에 방임하면 빈부격차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익부의 추세를 방지하면 중세 절대왕정시대의 불평등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새로운 모습의 소득 불평등: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소득불평등은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소득불평등은 과거의 소득불평등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OECD와 IMF도 강조하였듯이 오늘날의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한 소득불평등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까닭에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이라고 보아 왔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이런 견해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OECD의 한 연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성장 추세를 역사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소득 상위 20%의 몫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득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설령,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수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롤즈의 정의론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소득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적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의 많은 연구들이 지난 수년 동안 낙수효과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IMF나 OECD의 보고서들도 이를 뒷받침하면서 중산층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1990년 75%에 달한 중산층의 비중은 2013년 67.1%로 하락했다. 장하성 교수도 2008-2013

년 사이 경제는 11% 성장했으나 임금은 2.5% 성장에 그친 점을 들어 낙수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오늘날의 소득불평등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계층이동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10대 부자의 75%가 물려받은 부자다. 부의 계승이 심해지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가 편중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의 81%가 계층 상승에 회의적이다. 자연히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조적인 말이 퍼지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이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 기득권층이 공교육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적극 저지함으로써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학자들도 있다. Piketty는 상속, 증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세습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았고, IMF의 Lipton 부총재는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주된 원인으로 세계화, 기술진보, 그리고 노령화 등이 자주 꼽힌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낳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이 그 한 결과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과거에는 기계화가 단순노무직을 대체했지만 최근에는 중간 전문직을 대체하고 있다. 기술진보는 자본의 몫을 늘리면서 일자리의 총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 이에 적응하는 고학력자는 프리미엄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학력자는 실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득불평등 완화의 한 가지 큰 걸림돌은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지지부진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신정치경제학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경유착 및 부처이기주의를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소득불평등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이며, 시민들이 정치가를 잘 뽑고 정치권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주요 토론 포인트

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2013년 67.1%가 중산층으로 나타난 것은 3가구 중 2가구가 중산층이라는 의미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양호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최근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비교에 있어 한국동란 후 급속히 성장한 한국의 경우 Piketty 교수의 분석에 동의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학자별로 다르며, 자료 미흡으로 국내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조합이 정규직 취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에 노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중식 본부장(과정 32기)**은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여전히 50%가 근로자인데 노숙자들이 정부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나서려 하진 않는 점을 소개하면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전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감사원의 **김영석 과장(22기)**은 저소득층이 개인의 노력으로 소득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정전 명예교수**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산층이 튼튼하고 하위계층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면 부모의 지위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세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산시청 **김창모 본부장(과정 32기)**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라면 시민사회와 정치인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SH공사의 **김광석 본부장(과정 32기)**도 정부보조 없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도 포기하는 계층이 있다는

점과 자식의 취업 문제로 부모가 정년 후에도 직업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들어 정책적/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정전 명예교수**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선거에서 정치가를 잘 선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시민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관심'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상용 박사(과정 32기)**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제'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를 질의하였다. **이정전 명예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환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테면,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자원이라고 보아 이로 인한 이익을 국민에게 고르게 나누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자격을 가지듯이 국민 각자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배당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차원이 아닌 당위의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는 견해를 말했다.

* 이 토론노트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임혜연 조교의 요약, 정리를 바탕으로 재작성되었다. 교정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전성연 조교가 맡았다.

* 전, 후반기의 논의내용은 환경대학원 홈페이지(gses.snu.ac.kr-간행물-환경논총)에서 다시 볼 수 있다.